

선거명	제19대 국회의원선거		선거구명	충청남도 아산시	
후보자명	이명수	기호		소속정당명	자유선진당
공약번호: 1	공약 제목 : 대한민국의 정치혁신과 변화를 위한 국회 선진화 대책 추진				
1. 정책목표					
○ 국회 ‘폭력’과 ‘날치기’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					
○ 국회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강화					
2. 현행 제도의 문제점					
○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무제한, 쟁점안건의 늑장 처리					
○ 국회 질서문란행위 발생시 문책조항 미비로 국회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					
3. 추진계획					
(1) 추진방법					
○ 「국회법」 개정 추진					
○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, 국가안보 위협 등 일정한 요건으로 엄격한 제한					
○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이 헌법상 처리시한 48시간 전까지 자동 상정					
○ 국회질서유지 강화를 위해,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 금지의무와 보좌진 및 당직자의 국회의원 회의장 방해 금지규정 신설					
(2) 기한					
○ 2012년 말까지 「국회법」 개정안 발의					
○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					
4.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					
○ 별도의 소요예산 불필요					
공약번호: 2	공약 제목 : 서민경제 살리기 위한 서민,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강화				
1. 정책목표					
○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부담 경감					
○ 서민,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범위 확대					

2. 현행 제도의 문제점

-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의무 면제금액이 2000년 이후 동결
- 영세사업자의 경우 점포 임대료 및 종업원 임금 등을 지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지 못함
-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현실적 조정 필요

3. 추진계획

(1) 추진방법

- 과거와 달리 현재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해 세원이 노출되고 투명해짐
-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
- 「부가가치세법」 개정 추진

(2) 기한

- 2012년 말까지 「정부조직법」,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안 발의
-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

4.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

- 간이과세 기준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시 간이사업자는 97만명 증가
 - 이에 따른 세수감소는 5년간 약 590억원 정도로 추정
-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방안
 -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축소, 현행 1200만원으로 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금액 상향조정 등을 고려

공약번호: 3	공약 제목 : FTA발효에 따른 농림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강화
1. 정책목표	
○ 농·임·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
○ 농림축산 및 원예특용작물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	

2. 현행 제도의 문제점

- 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농림축산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, 농약, 농·임·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의 세율 적용
- 그러나 위 조항이 한시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, 기간만료 후 농림축산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
- 특히 한·미 FTA와 한·EU FTA를 비롯해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타결되고 있어,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

3. 추진계획

(1) 추진방법

- 농림축산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, 소득증대를 위해 농·임·축산업 등 기자재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하여 농림축산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
- 이를 위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 추진

(2) 기한

- 2012년 말까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안 발의
-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

4.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

- 현행법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규정
- 별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, 법안 통과시 세수감소 발생(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세수감소)
-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소는 FTA로 수혜받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재투자하도록 하는 근거를 별도 마련

공약번호: 4

공약 제목 :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제도개선

1. 정책목표

- 주민자치와 주민대표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과 기능회복
-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적 배경 실현
-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

2. 현행 제도의 문제점

-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가 지방의 유능한 인원을 정당에 충원하고, 지방조직 활성화 촉진을 이유로 인정
- 우리 정치현실과 정당운영의 비민주성, 지연·학연·혈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 감안시 현재 기초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허용으로 주민이 아닌 정당의 지시에 의한 의정활동 추진
-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자율적 운영이라는 본래 기능 상실

3. 추진계획

(1) 추진방법

-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에서 실현하는 것
 - 지방시정(地方施政)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이 스스로 다스리게 해야 함
- 지방자치의 이념적 배경에 충실하게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자는 특정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「공직선거법」의 개정 추진

(2) 기한

- 2012년 말까지 「정부조직법」,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안 발의
-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

4.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

- 별도의 소요예산 불필요

공약번호: 5	공약 제목 : 선진일류국가 지향을 위한 행정선진화 방안 마련
1. 정책목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진일류국가 지향에 걸맞은 정부조직의 개편 추진 ○ 부처간의 주요현안에 대한 국정통합조정기능 강화 	
2. 현행 제도의 문제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위상 약화 ○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편입되어 해양 분야 위상 약화 ○ 주요 현안 또는 재해? 재난 발생시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갈등을 조정 통합 기능 	

부재

3. 추진계획

(1) 추진방법

-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의 분리 추진
-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의 분리 추진
- 국무총리실 위상 및 역할 강화를 통한 ‘컨트롤타워’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「정부조직법」 개정 추진
-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직종 단일화 추진을 위한 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 추진

(2) 기한

- 2012년 말까지 「정부조직법」,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안 발의
-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

4.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

- 별도의 소요예산 불필요